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의안 번호	1403
----------	------

발의년월일 : 2005. 11. 10.

발 의 자 : 이창수 의원 외 인

☐ 제안이유

- 2005년 10월 27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강행처리하였음. 이제 국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경에 다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려하고 있음. 이에 맞서 전국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전국의 농촌에서는 농업 붕괴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쌀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것임.
이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계획에 반대하여 이를 철회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쌀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됨.
- 따라서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한 것을 강력히 촉구함.
 1.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1.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차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당면 농업현안 및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함.

국회의 11월 쌀비준안 강행처리 반대촉구 결의문

2005년 10월 27일 국회 통일외무위원회는 쌀협상 비준동의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이제 국회는 많은 국회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1월 16일경에 다수결로 본회의에 상정하려하고 있다. 이에 맞서 전국의 농민단체들과 농민들은 30만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를 예정하고 있고 전국의 농촌에서는 농업 붕괴에 대한 농민들의 절규가 메아리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에서는 농민출신 국회의원인 강기갑의원이 11월 9일로 14일째 목숨을 건 단식농성을 하고 있다.

이번 쌀협상 비준동의안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부는 우리나라 쌀 시장에 대한 관세화 유예를 10년 더 연장한다는 미국, 중국 등 9개국과의 합의문인 이행계획서(C/S), 수입쌀 입찰 등에 관한 기술적 절차적 사항인 이행절차 합의문, 중국, 아르헨티나, 캐나다, 인도, 이집트와의 양자간 합의사항인 부가합의문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국회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행계획서만 국회동의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이행계획서가 통과되면 나머지 2개도 효력을 발휘하게 되며 이렇게 될 때 사과, 배 등 우리나라의 과수농가는 전멸할 정도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국내 농업의 회생대책을 세운 다음에 쌀협상 국회비준동의안을 처리해야 할 것이다. 우리 농업은 산업화 과정에서 계속 축소되어 왔다. 국제 교역관계에서도 공산품 수출 지상주의에 의해 농산물 개방을 일방적으로 가속화해 왔다. 이제 국내 농업은 완전히 붕괴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농업은 비교역분야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한다. 카트리나처럼 엄청난 자연재해가 전세계를 덮쳐 세계의 식량위기가 닥쳤을 때 식량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식량이 무기화 될 것이고 엄청난 인구가 기아에 허덕이게 될 것이다. 이때 국내 농업이 붕괴된 상태라면 우리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러한 이유로 쌀비준안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따라서 안산시의회의원 일동은 정부와 국회에 다음의 내용을 이행한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정부와 국회는 쌀협상 국회비준을 11월에 처리하려는 계획을 철회하고 WTO 홍콩 각료회의가 끝나는 12월 18일 이후로 연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 쌀비준안 처리에 앞서 정부, 국회, 농민단체 3차 협의기구를 구성하고 당면 농업현안 및 근본적인 농업회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5. 11. 11.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